

# “배달비 보다 택시비가 싸다”... 택시기사들 공청회서 성토

서울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 “서울시 인상안, 졸속 대책” 비판 연구원 “인상폭 조정해야” 제언

심야 택시 부족 현상 해결 방안으로 기본요금 1만원으로 인상, 택시운임 2년 주기 조정, 요금 인상 시기 현실화 등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왔다.

5일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3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택시기사들은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던 이날 오후 공청회장 입구에서 택시기사들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울시민 승차대란 예견된 상황, 택시업계의 안정을 찾아 승차대란 해소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피켓에는 ▲택시운임, 물가상승분 대폭 반영하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 근로조건 개선하라 ▲버스 전용 차선 탄력적으로 시행하라 ▲택시운임 2년 주기로 현실화하라 ▲개인택시 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3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이 ‘서울시 택시대란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제 즉각 철폐하라 ▲불법을 함부로 ‘택시 리스제’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택시기사 A씨는 “배달비가 4500원인데 택시비가 3800원이다. 배달료보다 택시요금이 적다. 택시가 돈이 안 되니까 기사들이 다 나간다”며 “통달 배달이 1.5km에 4500원이다. 주말이면 500원, 비가 오면

1000원 할증한다. 산 사람을 운송하는데 2km에 3800원이다. 죽은 통달만도 못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청회에서 택시기사들은 서울시가 마련한 요금 인상안이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택시업계 종사자 B씨는 “원래 오세훈(시장)이 전에도 시장할 때 택시 요금을 2년 단위로 올려야 수요에 맞게 공급

이 올라간다고 했다”며 “내년 2월부터 요금을 인상하는데 그러면 택시 대란이 또 온다. 요금 인상은 올해 11월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하루 빨리 택시 대란을 막는 길은 내년 2월이 아닌 올 11월 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택시기사들이 택배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해 심야 택시 대란이 일자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동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1000원(26.3%) 오른 4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택시 기본 요금은 2019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26.7%) 올린 뒤 동결된 상태였다.

택시기사 C씨는 “항공이나 배, 철도 모두 운임 플러스 서비스 요금으로 돼 있다. 택시도 고급화해 기본 운임과 서비스 요금을 합쳐 택시 요금이 개선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5일 공청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

선 발표한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여러분들의 울분이 느껴져 발표를 할 때마다 착잡하다”며 “최저임금(월 환산액)이 182만원(2021년 기준)이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다 합치면 최소 200만원이 넘어가야 하는데 기사들이 가져가는 월급이 147만원이다. 아무리 계산해도 2022년에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고, 2021년 최저임금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택시요금 인상률이 160~170%는 돼야 정상이다”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용객들이 쓴 것만 원하다 보니 시장에는 비지떡만 나온다. 요금 인상폭을 실질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안 연구위원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확보책으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와 월급제에 대한 확실한 관리 및 감독 ▲합리적 수준에서 성과급 배분 기준금, 간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개별 회사별 임금협정서 취합 및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청소 상황실 설치... 순찰기동반 민원 대처

서울시, ‘추석 청소 대책’ 시행 쓰레기 배출일·방법 사전 안내

서울시는 추석 전후로 주요 도심 지역과 골목길 일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연휴 중에는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등 ‘추석 청소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추석 연휴 전인 이날부터 9월 8일까지 배출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 연휴 기간 구별 쓰레기 배출일과 배출 방법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인 이달 9~10일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이 금지된다. 11일에는 금천·강서·관악구 등 16개 구에서 폐기물을 버릴 수 있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2일 야간부터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청소 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서울시와 자치구에 청소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청소 순찰기동반 647명이 청소 민원 등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 직원 및 대행 환경미화원 6566명이 관내 주요 지역의

거리를 청소하고 배출된 생활 폐기물을 거둬갈 예정이다.

연휴가 끝난 9월 13일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밀린 폐기물을 일제히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허정원 서울시생활환경과장은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수거 등 청소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은 쾌적한 명절을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자제하고,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 날짜를 준수해 생활폐기물을 버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20년간 짜장면 나눔 ‘서울시 복지상’ 대상

서울시 관중회에 수여

서울시는 소외된 이웃에 20년간 짜장면을 무료로 나누는 관중회에 ‘제20회 서울시 복지상’을 수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제정된 ‘서울시 복지상’은 이웃사랑 실천으로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과 단체에 주는 상이다. 시는 매년 ▲복지자원봉사 ▲후원자 ▲종사자 3개 분야에 걸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각 분야 1명씩), 우수상 6명(분야별 2명씩) 등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지난 19년간 총 190명(단체)이 서울시 복지상을 받았다.

올해 대상의 주인공은 20년 동안 ‘짜장면 무료 나눔’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관중회(관악구중화요리봉사회)다.

이들은 2003년부터 정기적으로 지역 내 종합사회 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짜장면 나누기’를 진행했다. 홀몸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선한 영향력을 선물하며 약 6만명에게 배움을 선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20년간 봉사를 이어온 점을 인정받았다”며 “총 4만 5200명의 요식업 종사자들이 봉사에 참여해 5950만원 어치의 짜장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주거취약계층 청년에 이사비 지원

서울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해 젊은이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

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면서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93.4%가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청년 1인가구 가운데 46.1%는 월세 40만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비 지원 신청 기간은 이달 6일 오전 9시부터 9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김현정 기자

## 제3회 직업계고 IT분야 게임개발대회 본선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직업계고 IT분야 취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2022년 제3회 직업계고 IT분야 취업UP 게임개발대회[본선]’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재)미래콘텐츠재단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게임콘텐츠 관련 교육 활동 및 취업역량 제고 ▲IT분야 직무역량 향상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한 소통과 협업 능력을 함양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획됐다.

본 대회 참여 학생은 ▲게임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지식·소양 ▲게임 제작가자 알아야 할 저작권 ▲성공적인 게임기획안 작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경기도, 호우피해 주민에 275억 지급

추석 전까지 신속 지원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75억 원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1차 피해조사 확인을 마친 뒤 경기도에 167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도는 국비 교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총도비 부담액은 42억 원, 시군 부담액은 66억 원으로 도는 예비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의왕(청계동, 고천동), 용인(동천동)은 국고로 70% 지원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도 3천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비 교부에는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몫으로 건당 2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3,795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